

	일 본 (도 교) 사 무 소 해외동향보고서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성용찬 소장
		일시	202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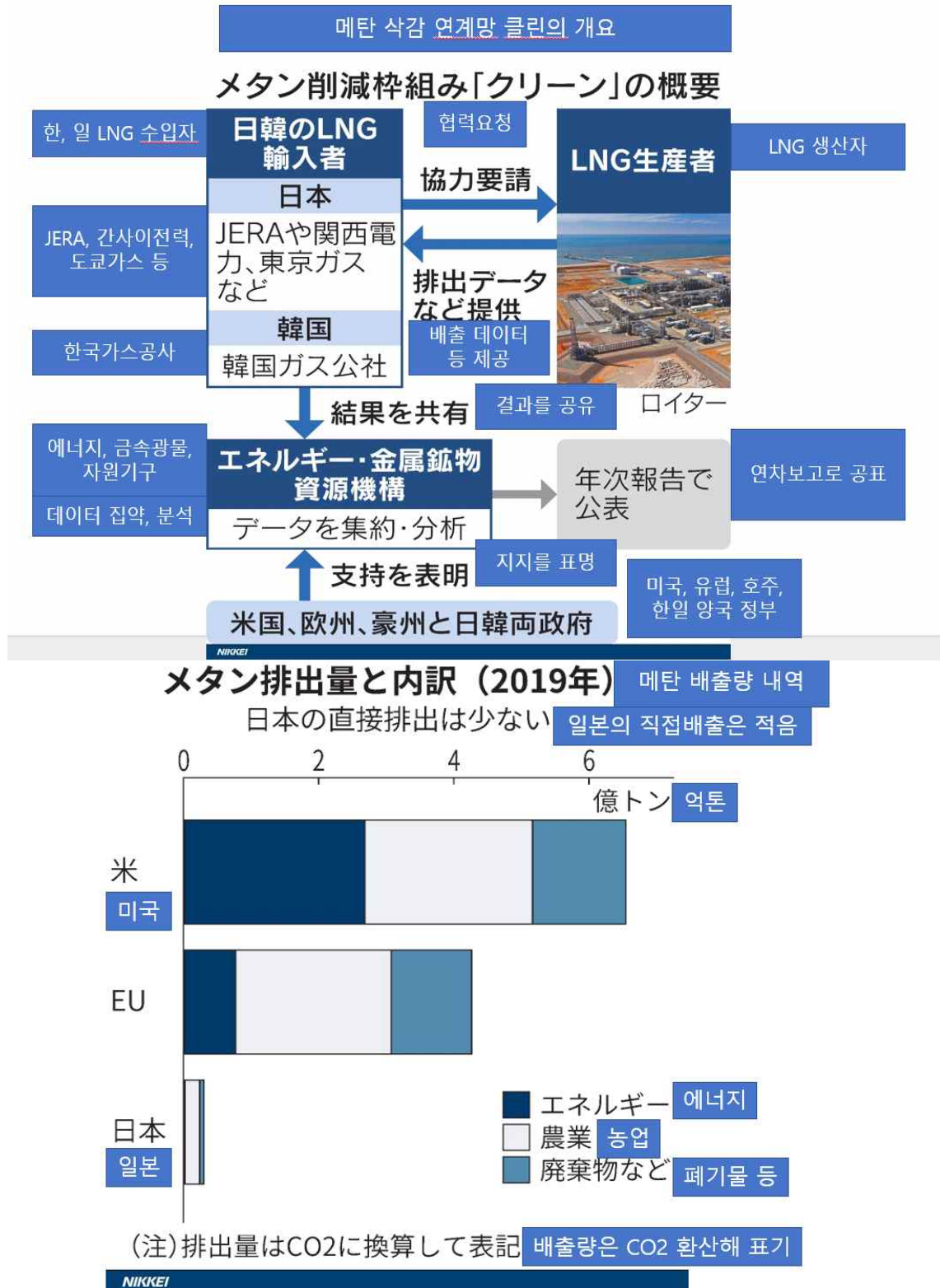
CEPA Insight

① 한일연합으로 메탄가스 삭감

② (철강) 일본정부 반덤핑관세에 우회수출도 포함시켜 국내산업 보호 움직임

① 한일연합으로 메탄가스 삭감(LNG 안정조달에 간사이 전력, 도쿄 가스 참가)

- LNG(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한일의 대기업을 가스전 메탄 배출대책에 공동으로 나섬. 전력공급 대기업 JERA와 한국가스공사의 연계망에 간사이 전력과 도쿄 가스 미츠비시 상사 등 20사가 넘는 회사가 참가 하고 있으며 LNG 공급원에 배출량의 공개를 촉구하고 있음.
- 참가기업의 LNG 취급량은 세계수요의 20%가 넘어 온실효과가 높은 메탄의 누설억제가 기대됨.
- 6일에 히로시마현에서 열린 LNG 생산자-소비자 회의에 맞춰서 각 회사가 참가를 표명하고 있음. 일본기업에서는 큐슈 전력이나 토호쿠 전력, 오사카 가스, 미츠비시 물산 등 조달량으로 일본 국내 상위 기업들이 더해짐. 히로시마 가스등의 중견기업도 들어가 있음. 합계로 세계 LNG 수요의 4분의 1에 필적할 전망.
- 각 회사는 JERA와 한국가스공사가 구축한 메탄 배출삭감 연계망 CLEAN(클린)에 참가하는 형태가 됨. 장기계약을 체결한 LNG 생산자에 대하여, 생산사업마다 메탄 배출량이나 대책을 확인함, 먼저 10월부터 JERA와 한국가스공사가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가스전 정보를 공개함.
- 양 기업이 계약하는 약 20개의 생산사업자 중에서 35%로부터 배출 데이터를 취득.
-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가 배출실적정보를 집약해 연차 보고 형식으로 갱신해감. 메탄 누출의 실적은 지금까지 국가 단위로 파악해왔지만, LNG의 생산사업의 단위로 데이터가 집약됨. 가스전에서의 공개상태가 명확해지면 기후변동 대책을 중시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메탄은 이산화탄소와 비교하면 온실효과가 20배 이상에 달하며 배출의 30%는 가스전이나 유전과 파이프라인 등의 관련 설비에서 생김. 다만, CO2와 비교해서 배출대책이 늦어져, 누출 대책은 가스 생산국의 자주 대처에 맡기는 부분이 큼.



- 메탄 억제책으로 미국은 24년부터 국가 기준을 초과하는 누출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함. 유럽의회는 수입하는 석유·가스에 메탄 배출 상황 보고를 27년부터 의무화함에 따라 유럽으로 가스를 수출하는 사업자들은 대책 마련이 필요.
- LNG 수입은 일본이 세계 2위, 한국이 3위임. 가스 생산국인 미국, 유럽 주도로 대책이 진

행되는 한편, 세계의 천연가스 산유국의 20퍼센트 정도는 중동, 5퍼센트는 동남 아시아가 점유하고 있음. 삭감에는 양 지역의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량 수입국인 한국, 일본에 대한 기대감이 강함.

(출처 : 니혼게자이신문, 2024. 10. 4.)

② (철강) 반덤핑관세에 우회수출 대상도 포함시켜 국내산업 보호 움직임

- 중국산 철강재 등 염두에 두고 일본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하려는 움직임.
- 현행 일본의 반덤핑관세 제도는 원산지와 제품을 핀포인트로 지정하여 적용하고 있어, 제품의 소재·부품을 제3국으로 옮긴 후 가공하거나 제품 성분·사양을 일부 변경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었음.
- 향후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수출이나 가공하여 크기를 변경하는 제품에도 과세함으로써, 중국산 철강재를 포함하여 과도히 저렴한 가격이 책정된 제품이 일본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함.
- 미국·유럽 등 G20 대부분의 국가는 우회 수출에 대응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흥국 또한 최근 중국산 철강재, 화학제품의 과도 유입 및 시장 교란에 유의하며 반덤핑관세 조사 실시
- 각국이 우회 조치를 포함시켜 저가 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만이 규제가 느슨할 경우 일본 국내 유입물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일본 정부가 조속한 대처의 필요성을 느껴 취한 조치로 추정
- * 우회 행위로 인해 과세 회피가 의심되는 제품에는 간이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재무성 관세·외환 등 심의회에서 논의하여 2025년 관세정률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다만 값싼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업자재의 가격이 상승해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인플레이션 주의 필요

(출처 : 코트라 도쿄 무역관, 2024. 9. 30.)